

민선 7기·8기 청년정책 분석 및 민선 9기 청년정책 제안 보고서 발표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말이 청년정책의 흐름 속에서 자주 등장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청년정책은 청년을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는 주체로 세우기보다, 이미 설계된 사업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대전 지역 청년들과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민선7기와 민선8기 청년정책의 흐름과 주요 사업들을 평가했다. 청년정책이 실제로 청년의 삶에 닿았는지와 그 간극을 확인 했다.

민선7기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청년 친화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내걸고, 청년정책의 영역을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문화·참여로 확장하려고 시도했다. 젠더공감 청년활동가 양성, 청년공익활동 지원 등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포착 하려는 시도도 있었다. 그러나 실제 예산 구조를 보면 청년예산의 74.6%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결국 취업·창업·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 정착이 핵심이었다. 대표 사업인 청년내일희망카드는 '구직의지 있는 미취업 청년'만을 전제로 설계되어, 고립·은둔 청년, 돌봄 부담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은 처음부터 정책 밖에 놓였었다.

민선8기는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 크게 확대되었다. 총 70개 사업에 약 1,160억 원 규모로 늘었다. 그러면서 대전청년내일재단 출범 등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제도 기반 마련이 곧 청년의 삶 중심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교육 예산의 상당 부분은 반도체·AI·양자 등 첨단산업 인력양성 사업으로 채워졌고, 대표 사업인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초혼·혼인신고 요건을 내세워 성소수자·사실혼·비혼·재혼·미혼·이주 청년을 배제했다. 청년의 삶에서 출발한 정책이 아니라, 인구 감소 대응이라는 행정 목표에서 설계된 사업이었다.

두 시기를 관통하는 한계는 분명하다. 청년을 연령 기준으로만 정의하면서 청년 내부의 다양한 삶이 가려졌고, 만족도·인지도 조사 중심의 행정이 반복되면서 청년의 삶을 제대로 파악하는 연구는 부재했다.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를 통한 청년참여는 있었지만, 청년의 제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부

족했다. 두 시정 모두 청년을 '살아가는 시민'이 아닌 '지역에 머물러야 할 인구'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민선9기 청년정책이 이전과 달라지려면,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꿔야한다. 대전은 청년을 붙잡아야 할 도시가 아니라, 청년이 살아가고 싶은 도시가 되어야 한다. 그 출발은 청년을 정착시켜야 할 인구가 아닌, 다양한 조건과 경험을 가진 채 지역을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인식하는 데 있다.

첫 번째로 다양성과 회복이 보장되는 도시로 나아가야 한다. 다양한 청년의 이야기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형식적 의견수렴을 넘어, 고립·은둔 청년, 돌봄 부담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등 공식 참여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의 목소리를 발굴하는 다층적 참여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청년 시기는 진로·취업·주거·관계 등 여러 전환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 조건과 연결되어있다. 실패 이후에도 다시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제9회동시지방선거 출마자에게 해당 보고서를 발송할 예정이며, 이후 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청년이 대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로의 방향 전환을 제안한다. 청년이 실패해도 다시 연결되고, 쉬어갈 수 있으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존중받는 지역을 만들어야한다. 그것이 민선9기 청년정책이 만들어야 할 대전의 모습이다.

청년에게는 ‘청년’ 정책이 필요해

-이름뿐인 청년정책을 넘어,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제안-

2026.05.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1장 정책 제안 배경	1
1. 청년은 늘었지만, 청년이 여전히 떠나는 도시 대전	1
2. 청년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3
3. 청년정책을 다시 묻다: 대전시 청년 정책은 청년에게 달았는가?	6
제2장 민선7기.민선8기 청년 정책 돌아보기	8
1-1. 민선7기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	9
1-2.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 :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	12
2-1. 민선8기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	14
2-2. 민선 8기 대표 청년정책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17
제3장 청년의 삶에서 바라본 대전시 청년정책의 한계	19
1. 모호한 청년의 개념: 청년정책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21
2.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청년정책	22
3. 정책 설계에서 제외된 청년들: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23
4. 청년을 ‘살아가는 사람’ 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인구’ 로 보는 정책 ·	24
제4장 청년에게는 ‘청년’ 정책이 필요해: 민선9기 청년정책 제안	26
1. 청년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OECD 청년정책	27
2. 정책 제안 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거버넌스 구축	28
3. 정책 제안 ② 근거에 기반한 청년정책 설계	30
4. 정책 제안 ③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31
5. 정책 제안 ④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33



[표 목차]

<표 1> 대전광역시 청년인구 이동현황(2020-2025) 1

<표 2> 대전광역시 25-39세 청년의 연도별 총 전출 현황 2

<표 3> 민선7기 분야별 청년 정책의 예산 현황 10

<표 4> 사업 성격에 따른 민선7기 청년 정책 분류 11

<표 5> 민선7기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 정리 13

<표 6> 민선8기 분야별 청년 정책의 예산 현황 14

<표 7> 사업 성격에 따른 민선8기 청년 정책 분류 16

<표 8> 민선8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 정리 18

<표 9> OECD 청년 정책 툴킷의 시사점 28

<표 10> 정책 제안 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거버넌스 구축 ... 29

<표 11> 정책 제안 ② 근거에 기반한 청년정책 설계 31

<표 12> 정책 제안 ③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32

<표 13> 정책 제안 ④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34

<표 14> 정책 제안 ⑤ 청년을 동반자로 보는 정책 지원 35

[그림 목차]

<그림 1> 대전광역시 후기 청년층(25-39세)의 연도별 총 전출 현황 2

<그림 2> 청년정책의 전환: 청년의 삶에서 출발하는 청년 정책 6

<그림 3> 대전시 청년정책 검토의 관점: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달았는가 .. 7

<그림 4> 청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비판적 검토 20

<그림 5> 청년의 삶에서 바라본 대전시 청년정책의 한계와 대안 25

1. 청년은 늘었지만, 청년이 여전히 떠나는 도시 대전

- 이장우 대전시장은 2026년 4월 21일 《미디어대전》과의 인터뷰에서 대전이 “청년층과 생산가능인구 중심으로 유입되는 역동적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25년 대전시 인구가 1,572명 증가해 전국 비수도권 광역시 중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는 점을 들어, 청년 인구 증가를 민선8기 시정의 주요 성과로 제시하였음
- 「국내이동통계」를 활용하여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대전시 청년인구의 이동현황을 분석한 결과, 대전시 청년인구의 순이동은 2022년을 기점으로 순유출에서 순유입으로 전환됨. 특히, 2025년에는 기존에 나타나던 ‘15~24세 전기 청년층의 순유입과 25~39세 후기 청년층의 순유출’이라는 흐름에서 벗어나, 25~39세 청년층 역시 순유입으로 전환

<표 1> 대전광역시 청년인구 이동현황(2020-2025)

구분	2020			2021			2022		
	총전입 (a)	총전출 (b)	순이동 (a-b)	총전입 (a)	총전출 (b)	순이동 (a-b)	총전입 (a)	총전출 (b)	순이동 (a-b)
15-19세	10,326	10,617	-291	8,831	9,098	-267	8,236	8,404	-168
20-24세	27,529	27,189	340	27,178	26,242	936	25,226	24,270	956
25-29세	34,888	35,869	-981	34,326	34,960	-634	33,123	33,270	-147
30-34세	25,843	26,976	-1,133	24,894	25,388	-494	24,475	24,793	-318
35-39세	21,074	22,284	-1,210	17,912	18,886	-974	16,640	16,765	-125
계	119,660	122,935	-3,275	113,141	114,574	-1,433	107,700	107,502	198

구분	2023			2024			2025		
	총전입 (a)	총전출 (b)	순이동 (a-b)	총전입 (a)	총전출 (b)	순이동 (a-b)	총전입 (a)	총전출 (b)	순이동 (a-b)
15-19세	8,355	7,956	399	8,915	8,390	525	9,798	8,663	1,135
20-24세	23,673	22,145	1,528	25,186	23,413	1,773	25,432	23,390	2,042
25-29세	30,486	30,841	-355	31,291	32,276	-985	32,911	32,705	206
30-34세	23,436	23,913	-477	26,238	26,623	-385	28,491	28,171	320
35-39세	15,076	15,618	-542	15,985	16,324	-339	17,459	17,594	-135
계	101,026	100,473	553	107,615	107,026	589	114,091	110,523	3,5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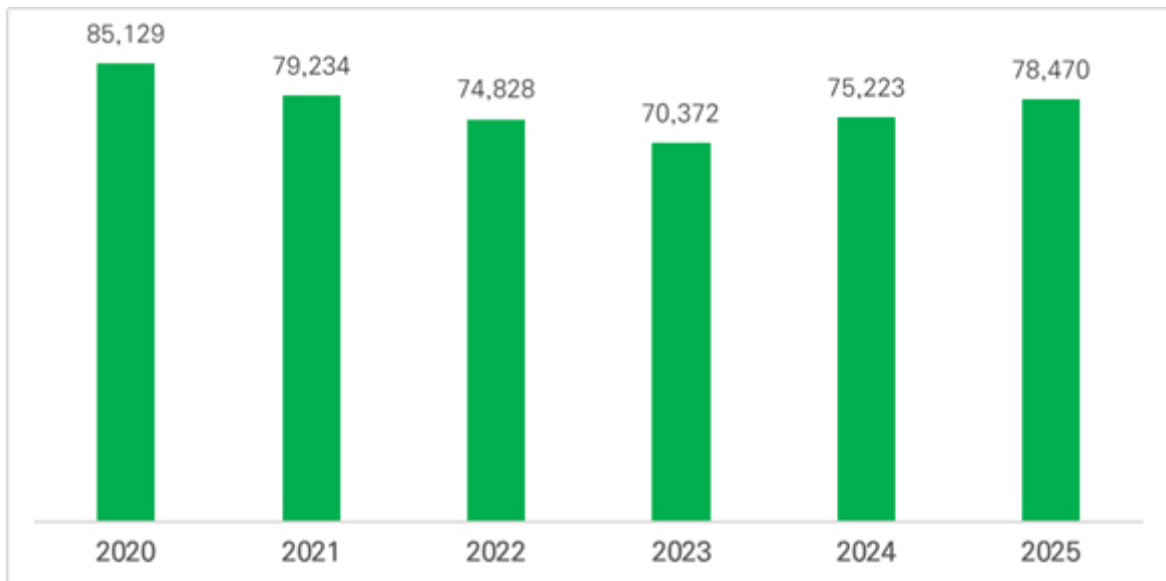
자료: 국가데이터처, 「국내인구이동통계」

□ 이러한 통계는 대전시 청년인구 증가가 청년정책의 성과로 해석될 여지를 제공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전히 적지 않은 청년들이 대전을 떠나고 있다는 현실이 존재함

□ 25~39세 후기 청년층¹⁾의 총전출 규모를 살펴보면, 매년 7만 명 이상의 청년이 대전을 떠나고 있음. 특히, 대전시가 청년인구 증가를 주요 성과로 제시한 2025년은 민선8기 시정 출범 이후 25~39세 청년의 타지역 전출 규모가 가장 컸던 해임. 이는 청년인구 순유입이라는 성과 이면에 여전히 큰 규모의 청년 유출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2> 대전광역시 25~39세 청년의 연도별 총 전출 현황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5~29세	35,869	34,960	33,270	30,841	32,276	32,705
30~34세	26,976	25,388	24,793	23,913	26,623	28,171
35~39세	22,284	18,886	16,765	15,618	16,324	17,594
계	85,129	79,234	74,828	70,372	75,223	78,470



<그림 1> 대전광역시 후기 청년층(25~39세)의 연도별 총 전출 현황

1) 본 보고서에서 15~24세 전기 청년층보다 25~39세 후기 청년층의 이동에 주목하는 이유는, 후기 청년층의 이동이 지역 정주 가능성을 보다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임. 15~24세 청년층은 대학 진학 등 교육 목적의 이동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일정 기간 지역에 머문 뒤 취업이나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시기에 다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음. 반면 25~39세 청년층은 취업, 주거, 결혼, 가족 형성, 지역 내 생활 기반 구축 등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지는 청년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임

- 대전 지역 청년들의 전출 규모가 여전히 크다는 점은 기존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과 정주 조건을 충분히 포착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줌. 따라서 청년정책은 단순히 사업을 확대하거나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됨. 청년들이 대전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경험을 통해 지역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지역을 떠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청년이 지역에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야 함
 - 그동안 대전시 청년정책은 저출생고령화 방지 및 청년 인구 유출과 지역 정착 문제에 대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지니지만, 여전히 청년을 지역 인구 유지와 경제활동 인구 확보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인구경제적 관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한계가 있음
 - 반면 최근 OECD Youth Policy Toolkit 등에서는 청년을 단일한 정책 대상으로 보기보다, 다양한 삶의 조건과 배경을 가진 주체로 이해하고, 청년정책에 다양성·포용성·참여의 관점을 반영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따라서 민선9기 청년정책은 청년을 인구 감소 대응의 수단으로 바라보는 접근을 넘어, 청년의 삶과 권리, 사회적 관계, 안전, 생활환경, 문화와 참여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민선9기 대전 시정은 청년정책을 단순한 사업 공급이나 성과 홍보의 수단으로 다루어서는 안 됨. 청년들이 왜 대전을 떠나는지, 무엇이 지역 정착을 어렵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삶의 조건이 필요한지를 청년의 목소리를 통해 확인하고, 이를 정책 설계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함

2. 청년정책,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가?

1) 지역의 지속가능성과 청년

-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논의할 때 청년은 중요한 의미를 지님. 청년은 단순한 연령집단이 아니라, 지역의 노동시장, 소비, 문화, 공동체 활동, 가족 형성 등 다양한 영역과 연결되어 지역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구성하는 핵심 주체임

- 따라서 청년의 유출은 특정 연령대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경제적 활력, 사회적 관계망, 생활 기반 등 지역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이 약화될 수 있음을 의미함
- 청년들이 지역에서 교육을 받고 성장하더라도, 취업, 주거, 문화, 관계망의 조건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으면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게 됨. 특히 대전은 15~24세 전기 청년층이 교육 등을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도시이지만, 사회생활이 본격화 되는 25세 이후부터는 청년 유출이 나타나는 구조를 보이고 있음
- 이러한 흐름이 반복될 경우 대전은 인재를 길러내지만 정착시키지 못하는 도시가 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대전의 인구 구조, 산업 기반, 지역 활력에 영향을 미쳐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 개인에 대한 단편적 지원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됨.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고, 관계를 맺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임
- 이런 점에서 청년정책은 복지나 일자리 분야의 개별 사업을 넘어, 청년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종합적인 지역정책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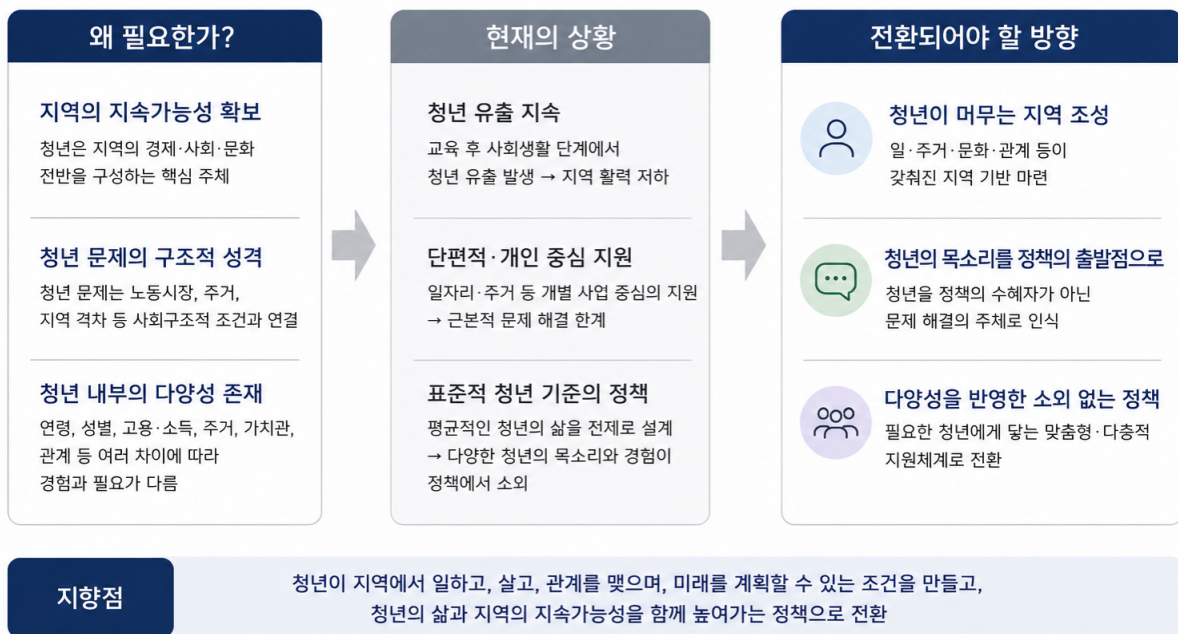
2) 사회구조적 문제로서 청년 문제

- 청년 문제는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시장, 주거, 지역 격차, 사회적 안전망 등 사회구조적 조건과 연결된 문제임
- 그러나 기존 청년정책은 이러한 구조적 조건을 충분히 바꾸기보다, 청년 개인에게 일자리 정보, 생활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방식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음
 - 이러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청년이 지역에서 왜 불안정한 삶을 경험하는지, 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청년정책은 청년을 단순히 '지원받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함.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경험하고 해석하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주체임.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조건 속에서 지역을 떠나거나 머물기를 선택하는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를 정책 과정에서 직접 말할 수 있어야 함

- 이런 점에서 청년정책은 행정이 미리 설계한 사업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방식에 머물러서는 안 됨. 대전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겪는 어려움과 요구를 정책 수립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하며,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진단하고 해결해 나가는 주체로 인식해야 함

3)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한 소외 없는 청년정책

- 청년은 하나의 동일한 집단이 아닌 다층적인 집단임
 -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연령, 성별, 학력, 고용상태, 소득수준, 주거형태, 가족관계, 건강 상태, 사회적 관계망 등에 따라 지역에서 경험하는 어려움과 필요한 정책은 다를 수 있음
 - 또한 청년들은 삶의 가치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인식, 관계 맺는 방식, 문화적 취향, 지역에 대한 기대와 감각에서도 서로 다른 특성을 보임
- 그러나 그동안의 청년정책은 청년 내부의 다양한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일자리, 창업, 주거 등과 같이 개별 분야에서 사업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음
- 이러한 방식은 사업 수, 참여자 수, 지원 금액 등으로 정책 성과를 보여주기에 용이하지만, 실제로 어떤 청년이 정책에 접근하고 있는지, 어떤 청년이 정책 밖에 남겨져 있는지, 그리고 청년들이 원하는 삶의 방식이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그동안의 청년정책은 정책이 상정한 '표준적인 청년의 삶'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그 결과 다양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의 경험과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지원에서 소외되는 경향이 있었음
- 따라서 청년정책은 '평균적인 청년'을 상정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정책이 실제로 필요한 청년에게 닿고 있는지, 기존 정책이 놓치고 있는 청년은 누구인지, 청년들이 어떤 삶을 원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함. 이를 바탕으로 청년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반영한 소외 없는 지원체계로 청년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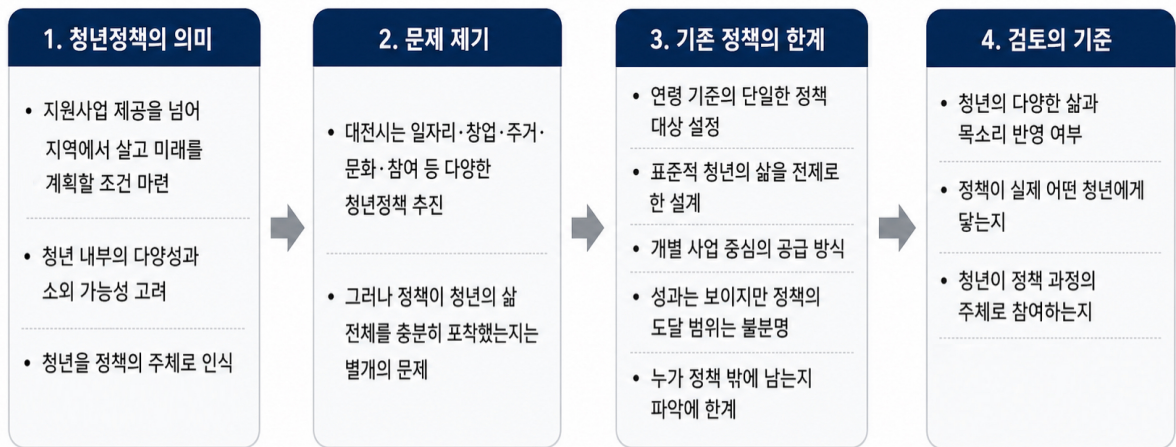


<그림 2> 청년정책의 전환: 청년의 삶에서 출발하는 청년 정책

3. 청년정책을 다시 묻다: 대전시 청년 정책은 청년에게 닿았는가?

- 앞서 살펴본 것처럼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 개인에게 지원사업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정책을 의미함. 이를 위해서는 청년 내부의 다양성과 소외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하며, 청년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닌 함께 정책을 만들어가는 적극적 주체로 바라봐야 함
-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대전시 청년 정책은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음. 그동안 대전시는 일자리, 창업, 주거, 문화, 참여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추진해왔지만, 정책이 청년의 삶 전체를 충분히 포착했는지는 별개의 문제임
- 청년을 주로 연령 기준에 따른 단일한 정책 대상으로 설정하고, 평균적 표준적인 청년의 삶을 전제로 사업을 설계할 경우, 다양한 조건과 욕구를 가진 청년들은 정책 과정에서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움
- 특히 개별 사업 중심의 공급 방식은 사업 수, 참여자 수, 예산 규모와 같은 성과를 보여주기에는 용이하지만, 실제로 어떤 청년에게 정책이 닿고 있는지, 어떤 청년이 정책 밖에 남겨져 있는지, 청년들이 왜 지역을 떠나거나 머무는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대전시 청년정책을 살펴볼 때에는 단순히 어떤 사업이 얼마나 추진되었는지를 넘어, 정책이 청년의 다양한 삶과 목소리를 얼마나 반영했는지,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 과정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었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는 민선7기와 민선8기 청년정책을 돌아보고, 각 대표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어떤 청년에게 도달했는지 살펴보고자 함. 이는 민선9기 청년정책의 새로운 방향을 제안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음.



! **핵심 질문: 얼마나 많은 사업을 했는가가 아니라, 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닿았는가**

<그림 3> 대전시 청년정책 검토의 관점: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닿았는가

- 본 연구는 민선7기와 민선8기 청년정책을 비교하여, 대전시 청년정책이 그동안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함. 특히 민선7기 허태정 시장과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이 2026년 지방선거의 주요 시장 후보라는 점에서, 두 시정의 청년정책을 비교하는 것은 향후 대전 청년정책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짐
- 분석 자료는 2021년과 2025년 대전시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활용함. 임기 초 사업예산은 시정 방향을 세워가는 기간으로 사업 방향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두 자료는 각각 민선7기와 민선8기의 종료 전 해에 수립된 시행계획이라는 점에서, 두 시정의 청년정책 추진 방향과 주요 특징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데 적절한 자료로 판단하여 선정함
- 총 예산이 아닌, 청년예산을 기준으로 대전시 청년정책의 구성과 집행 양상을 살펴봄
- 다만, 분야별 예산 구조만으로는 청년정책의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예산상으로는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로 구분되어 있지만, 실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청년에게 직접 지원이 이루어지는 사업, 청년 내부의 다양성과 취약성을 반영한 사업,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한 사업, 전달체계 및 거버넌스 구축 사업 등이 혼재되어 있음
-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청년정책을 사업 성격에 따라 ① 청년 직접지원 사업, ② 청년 취약성·다양성 반영 사업, ③ 인구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 ④ 전달체계·거버넌스·행사성 사업, ⑤ 산업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 ⑥ 일반복지·일반시민 대상 사업 의 청년 몫,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함
 - 이러한 분류는 단순히 사업을 재배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실제 청년의 삶과 요구에서 출발한 청년정책인지, 혹은 청년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산업정책·일반복지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임
- 산업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산업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으나, 청년정책으로 분류하는 데에는 비판적 검토가 필요함. 이러한 사업은 청년의 삶과 요구에서 출발하기보다 지역산업 육성, 창업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 기업지원의 성격이 강할 수 있기 때문임

- 한편 인구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은 산업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결혼, 출산, 양육,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은 실제 청년의 삶과 연결되어 있으며, 정책 대상 역시 청년 또는 청년부부를 포함한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의 일부로 볼 수 있음. 다만 결혼, 출산, 양육은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애주기와 가족, 주거, 돌봄, 지역사회 전반이 연결된 문제이기도 함. 따라서 이를 청년정책으로만 분류하는 것이 적절한지, 혹은 청년의 다양한 삶을 결혼과 출산 중심으로 좁혀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분석은 청년 정책이 일부 지역 인재나 특정 산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머물러서는 안 되며, 동시에 결혼과 정착이라는 특정한 생애경로만을 전제해서도 안 된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함
- 청년정책은 다양한 조건과 욕구를 가진 다수의 청년을 포괄하고, 이들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고, 관계를 맺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
- 이런 점에서 산업 중심의 청년사업과 인구정책 결합형 사업이 청년정책 안에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청년들이 정책 밖에 남겨지는지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1-1. 민선7기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

- 민선7기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청년 친화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① 청년 경제적 자립 기반 구축, ② 청년 주도 활동 보장, ③ 소통과 시정 참여 활성화, ④ 청년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주요 전략 목표로 삼음
- 2021년 청년정책의 총 사업 수는 54개였으며, 예산은 약 539억원임
 - 분야별로는 일자리 28개(40,270백만원, 74.6%), 주거 4개(3,310백만원, 6.1%), 교육 4개(1,409백만원, 2.6%), 복지·문화(6,499백만원, 12.0%), 참여·권리 7개(2,484백만원, 4.6%)임
- 민선7기 청년정책은 일자리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 전반으로 정책 영역을 확장하려는 방향을 보였음. 특히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포스트코로나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청년주도의 활동지원’ 등은 청년 내부의 다양성과 자발적 활동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예산 구조를 보면, 청년예산의 74.6%가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음. 따라서 민선7기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려는 문제의식은 있었지만, 실제 무게중심은 취업, 창업,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정착에 놓여 있었다고 해석할 수 있음

<표 3> 민선7기 분야별 청년 정책의 예산 현황

구분	정책 수(개)	청년예산(백만원)	비중(%)
일자리	28	40,270.4	74.6
주거	4	3,310	6.1
교육	4	1,409	2.6
복지·문화	11	6,499.1	12.0
참여·권리	7	2,484.6	4.6
합 계	54	53,973.1	100.0

- 민선7기 청년정책을 사업 성격에 따라 분류해보면, 청년 직접지원 사업이 24개, 32,697백만원으로 전체 청년예산의 60.6%를 차지함. 이는 민선7기 청년정책이 청년의 취업, 창업, 직무경험, 구직활동, 주거비, 학자금, 자산형성 등 청년 개인에 대한 직접 지원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줌
- 청년 취약성·다양성 반영 사업은 16개, 5,825.1백만원으로 10.8%를 차지함.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청년 마음건강 지원’,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청년커뮤니티 지원’ 등은 청년을 단일한 취업지원 대상으로만 보지 않고, 다양한 삶의 조건과 활동을 가진 주체로 포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한편 산업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은 8개, 14,047.4백만원으로 전체 청년예산의 26.0%를 차지함. 창업생태계 조성, 초기창업패키지, 과학기술 일자리, 전문연구인력 지원, AI 혁신학교 등은 청년의 일자리와 역량 형성에 기여할 수 있으나, 청년의 삶과 요구에서 출발한 정책이라기보다 지역산업 육성, 창업 생태계 조성, 전문인력 양성의 성격이 강한 사업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민선7기 청년정책은 청년 직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반영하려는 시도도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산업정책 성격의 사업이 전체 청년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청년정책이 일부 지역 인재나 특정 산업 분야에 진입할 수 있는 청년에게 집중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은 특정한 역량을 가진 청년만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욕구를 가진 다수의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표 4> 사업 성격에 따른 민선7기 청년 정책 분류

구분	개수 (청년예산, 비중)	사업명
청년 직접지원 사업	24개 (32,697백만원, 60.6%)	① 대전 일자리카페 꿈터 운영, ②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사업, ③ 청년인턴지원사업, ④ 대전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⑤ 대학 일자리센터 운영, ⑥ 우수기업 청년 채용 지원사업, ⑦ 대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⑧ 대전 중소기업 내일채움공제, ⑨ 대학 취업역량강화지원, ⑩ 해외취업 지원사업, ⑪ 컨택센터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 ⑫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⑬ 지역특화산업청년인재채용 지원사업, ⑭ 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대전청년 내일희망카드), ⑮ 구직 청년 면접 정장 대여사업, ⑯ 대전청년 내일(JOB)로 프로젝트, ⑰ 청년창업카드 지원, ⑱ 청년농업인 특성화육성 시범사업, ⑲ 청년주택임차보증금 융자지원, ⑳ 청년 주거정책 교육, ㉑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㉒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㉓ 청년희망통장 지원, ㉔ 청년인재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청년 취약성·다양성 반영 사업	16개 (5,825.1백만원, 10.8%)	①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②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③ 포스트코로나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④ 미혼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⑤ 대전청년 유니브연극제, ⑥ 대전 청년작가장터, ⑦ 이응노미술관 청년작가 전시프로젝트, ⑧ 청년예술인 지원사업, ⑨ 청년희망키움통장, ⑩ 청년저축계좌, ⑪ 청년 마음건강 지원, ⑫ 청년 1인가구 지원 프로그램, ⑬ 청년작가 지원전(넥스트코드), ⑭ DJAC 청년오케스트라 운영, ⑮ 청년주도의 활동지원, ⑯ 청년커뮤니티 지원
인구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	1개 (0백만원*, 0.0%)	①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
전달체계·거버넌스·행사성 사업	5개 (1,403.6백만원, 2.6%)	① 대학-지자체 연계 거버넌스 구축, ② 대청넷 운영 ③ 대전 청년주간, ④ 청년공간운영, ⑤ 대전 청년내일센터 운영
산업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	8개 (14,047.4백만원, 26.0%)	① 창업생태계 조성 및 스타트업파크 운영, ② 초기창업패키지, ③ 기술융합 소셜 벤처 창업기업 인건비 지원사업, ④ 성장단계 창업기업 육성사업, ⑤ 과학기술 대전형 일자리 창출사업, ⑥ 전문연구인력 지원 사업, ⑦ 온택트(ontact) 디자인 큐레이터 육성 지원사업, ⑧ 인공지능(AI) 혁신학교 아이펠(AIFEL)대전 운영
일반복지·일반 시민 대상 사업	0개 (0백만원, 0.0%)	-
합 계 54개 / 53,973.1백만원 / 100.0%		

1-2. 민선 7기 대표 청년정책 :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지원(대전청년내일희망카드)

- 청년정책모니터링단은 각 시기마다 청년정책을 대표하는 청년정책 1개씩을 확인했음. 두 시정이 청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어떤 청년의 삶을 정책의 중심에 놓았는지 확인했음
- 청년취업희망카드는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이상 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에게 구직활동비 명목으로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총 300만 원을 포인트 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이었음.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요건을 설정하여 경제적 취약 청년을 우선 지원하려는 취지를 담았으며, 지원항목은 교육비·면접비·교통비·자격증 취득비 등 구직활동 전반임
- '구직의지가 있는 청년'만을 상정한 설계 : 청년내일희망카드는 사업 대상을 '적극적인 구직활동과 사회참여 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으로 명시함. 이 표현은 청년 문제를 개인의 의지와 활동성의 문제로 환원하는 시각을 담고 있음. 구직의지를 '지원 조건'으로 설정하는 순간, 그 의지를 증명하기 어려운 청년은 정책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 됨
- 결국 고립·은둔 상태에 있어 구직활동을 시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청년, 가족 돌봄을 담당하고 있어 구직에 투자할 시간과 에너지가 없는 청년, 불안정 노동을 반복하면서 '미취업'과 '취업'을 오가는 청년 (주 30시간 이상 근로 시 취업자로 분류되어 신청 불가), 마음건강 위기 상황에 있어 공식 절차를 밟기 어려운 청년, 기초생활수급자(지원 시 수급액 삭감 불이익으로 실질적 접근 어려움)는 지원하기 어렵게 됨
- 2016년 서울시가 도입한 청년수당의 문제의식은 청년이 정형화된 취업 훈련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배경으로 도입되며 전국으로 확산됐음
- 하지만 대전의 사업은 사용처를 교육비·면접비·교통비·자격증 취득비·식비 등으로 제한하며 한정했음. 카드 결제 후 사후환급, 전용 포인트몰에서만 사용가능한 구조 역시 행정이 승인한 구직활동안에서만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설계됨
- 더 근본적인 문제는 이 사업이 '취업'을 청년이 나아가야 할 유일한 방향으로 설정한다는 점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 예술이나 공익 활동을 통해 삶을 꾸리는 청년, 학업을 이어가고 있는 청년, 일과 삶의 방식을 다르게 선택하고 있는 청년의 삶은 정책에 존재하기 어려움

- 사업 참여자의 성별·연령·학력·취업 형태별 구성, 사업 참여 이후 취업 전환율 등에 관한 공개 통계는 존재하지 않음. 어떤 청년이 이 정책에 실제로 닿았는지, 어떤 청년이 정책 밖에 남겨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 자체가 이 사업의 다양성 사각지대를 보여줌
-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청년이 처한 구조적 어려움 '노동시장 진입 장벽, 생계 불안' 등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음. 청년이 참여하고 제안하는 과정에 생겨난 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 다만, 대전에서 정책화 되며 설계가 좁아진 결과는 행정의 결과 청년 참여 구조 결정, 책임 구조를 확대 시킬 필요가 있음

<표 5> 민선7기 대전청년취업희망카드 사업 정리

구분	대전 청년내일희망카드 (민선7기)
사업 시작	2017년
사업 상태	종료
지원 대상	만 18~34세 대전 거주 미취업 청년(가구 중위소득 150% 이하)
지원 금액	최대 300만 원(월 50만 원 × 최대 6개월)
지원 방식	구직활동 포인트 지급(교육비·면접비·교통비 등)
사업 규모	초기 6,000명 → 이후 1,000명 → 140명으로 축소
선정 방식	서류심사(정량) + 구직활동계획서 평가
주요 수혜 통계	참여자 유형·성과 통계 미공개
정책 목적	미취업 청년의 구직활동 지원,경제적 자립 촉진
상정하는 청년상	구직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취업 준비 중인 청년')
정책 성격 분류	청년 직접지원 사업

*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대전드림타운 3천호 공급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총 사업비는 32,500백만원이지만, 국비와 시비사업이며, 청년예산은 0원임

2-1. 민선8기 청년정책의 주요 내용과 방향

- 민선8기는 2024년 ‘대전청년내일재단’ 출범과 「2024~2028년 대전형 청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청년정책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청년 수요 맞춤형 정책을 확대하는 방향을 제시함. 특히 2025년 시행계획에서는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고용 안정화, 주거 문제 해결, 미래세대 역량 강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 마련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설정함
- 2025년 청년정책의 총 사업 수는 70개였으며, 청년예산은 약 1,160억원임.
 - 분야별로는 일자리 22개(11,323백만원, 9.8%), 주거 9개(31,935백만원, 27.5%), 교육 10개(23,118백만원, 19.9%), 복지·문화 19개(45,476백만원, 39.2%), 참여·권리 10개(4,181백만원, 3.6%)임

<표 6> 민선8기 분야별 청년 정책의 예산 현황

구분	정책 수(개)	청년예산(백만원)	비중(%)
일자리	22	11,323	9.8
주거	9	31,935	27.5
교육	10	23,118	19.9
복지·문화	19	45,476	39.2
참여·권리	10	4,181	3.6
합 계	70	116,033	100.0

- 민선8기 청년정책은 민선7기에 비해 청년정책의 규모와 제도적 기반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특징을 보임
 -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 ‘대전청년포털 통합운영’,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청년활동공간 운영’ 등은 청년정책의 전달체계와 참여 기반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 위험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 주거 취약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음

- 예산 구조를 보면, 민선8기 청년정책은 민선7기와 달리 일자리 분야의 비중이 크게 감소하고, 복지·문화, 주거, 교육 분야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음. 이는 청년정책이 단순 취업·창업 중심에서 벗어나 청년의 생활 안정, 주거 안정, 자산형성, 마음건강, 문화예술, 교육·역량 강화 등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곧바로 청년의 삶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교육 분야 예산의 상당 부분은 양자대학원, 반도체공학대학원,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반도체 특성화대학,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등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청년정책이라기보다 산업정책적 성격이 강한 측면이 있음
 - 산업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은 9개이며, 총 예산은 약 230억원(20.0%)임
- 일부 사업은 청년을 주요 대상으로 설계한 정책이라기보다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임에도, 청년 수혜분이 포함된다는 이유로 청년정책에 포함되고 있음. 이는 청년정책을 사업의 목적과 내용이 아니라 대상 포함 여부만으로 분류한 결과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방식은 청년정책의 예산 규모와 사업 수를 실제보다 크게 보이게 할 수 있으며, 정작 청년의 삶과 요구에 직접 닿는 정책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일반복지·일반 시민 대상 사업은 3개, 총 예산은 11,778백만원(10.2%)임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청년만남 지원사업’,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등은 청년의 삶과 연결되는 정책이면서도 결혼·출산·정착을 유도하는 인구정책적 성격이 함께 나타남
 - 인구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은 4개, 총 예산은 16,295백만원(14.0%)임
- 결국 민선8기 청년정책은 사업 수와 예산 규모 면에서는 확대되었지만, 그 확대가 실제 청년의 삶과 목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산업정책, 인구정책, 일반 시민 대상 사업까지 청년정책에 포함되면서 청년정책의 외형은 커졌지만, 정작 청년의 다양성, 소외 가능성, 지역에서의 삶의 조건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정책은 제한적으로 나타남
- 따라서 민선8기 청년정책은 ‘많아진 청년정책’이라기보다 ‘청년정책으로 분류된 사업이 많아진 것’(약 500억원) 가까운 측면이 있음. 청년정책의 성과는 사업의 수나 예산 규모가 아니라, 실제 청년에게 얼마나 닿았는지, 정책 밖에 남겨진 청년을 얼마나 발견하고 지원했는지,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로 평가되어야 함

<표 7> 사업 성격에 따른 민선8기 청년 정책 분류

구분	개수 (청년예산, 비중)	사업명
청년 직접지원 사업	27개 (36,750.5백만원, 31.7%)	① 컨택센터 청년 신규채용 지원사업, ② 청년 패션전문가(커리어-업) 직업 역량 강화, ③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④ 대전산업단지 2030 일자리 육성 프로젝트, 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⑥ 소셜벤처 서밋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⑦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⑧ 청년인턴 지원사업, ⑨ 대전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⑩ 대학 일자리플러스센터 운영, ⑪ 대전형 코업(co-op) 청년 뉴리더 양성, ⑫ 대전 정착형 청년일자리 종합 프로젝트, ⑬ 대전 일자리카페 꿈터, ⑭ 구직청년 면접용 정장 대여, ⑮ 대학 취업역량강화 지원, ⑯ 해외취업 지원사업, 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⑱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시범, ⑲ 청년 맞춤형 공적 임대주택 공급, ⑳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국토부), ㉑ 대전청년하우스 운영, ㉒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차지원, ㉓ 대전청년 월세지원 사업, ㉔ 대학생 학자금 이차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㉕ 미래인재육성 장학금 지원, ㉖ 미래두배 청년통장 지원, ㉗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청년 취약성·다양성 반영 사업	18개 (24,119백만원, 20.8%)	① 청년성장 프로젝트, ② 청년도전 지원사업, ③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④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⑤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초과), ⑥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⑦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⑧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마음건강 특화), ⑨ 청년중독관리사업, ⑩ 청년 제대군인 진로탐색비 지원, ⑪ 대전시민합창단 운영, ⑫ 대전아트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운영, ⑬ 대전청년작가 유통지원, ⑭ 청년예술인 지원, ⑮ 대전청년 유니브 연극제, ⑯ 청년작가 지원전(넥스트코드2025), ⑰ 청년활동 지원사업, ⑱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인구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	4개 (16,295백만원, 14.0%)	① 청년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②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③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④ 청년만남 지원사업
전달체계-거버넌스-행사성 사업	9개 (3,845백만원, 3.3%)	① 대전 일자리 페스티벌, ②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대청넷 8기), ③ 대전 청년주간 운영(학술), ④ 청년 서포터즈 운영, ⑤ 대전 청년 소통공감 행사, ⑥ 대전청년내일재단 운영, ⑦ 대전청년포털 통합운영, ⑧ 청년활동공간 운영, ⑨ 자치구 청년공간 운영지원
산업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	9개 (23,245백만원, 20.0%)	① 나노전문인력양성 및 일자리지원사업, ② 지역지능화혁신 인재양성사업, ③ 에너지기술 공유대학(ETU) 인력양성사업, ④ 양자대학원 지원, ⑤ 반도체공학대학원 지원, ⑥ 인공지능반도체대학원 지원, ⑦ 반도체 특성화대학 지원사업, ⑧ 메타버스 융합대학원 지원, ⑨ 반도체 조기취업형계약학과 선도대학 육성
일반복지·일반 시민 대상 사업	4개 (11,778백만원, 10.2%)	①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②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③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K-패스)
합 계 54개 / 53,973.1백만원 / 100.0%		

2-2. 민선 8기 대표 청년정책 :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 민선 8기 첫 시작된 사업으로, 대전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 초혼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1인당 250만원(부부 합산 5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임. 소득·재산 요건은 별도로 없고, 연령·혼인·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신청 가능함
- 청년취업희망카드는 청년이 처한 문제의식 해결로 청년 참여로 시작 됐다면,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행정의 인구정책 목표로 시행된 정책임. 청년이 결혼하기 어렵다는 의제보다, 대전시가 청년인구를 붙잡아야한다는 필요에서 설계됨
-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대전시는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명시적 목표로 내걸고 만남->결혼->정착->출생을 단계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패키지로 내세웠으며, 결혼장려금이 핵심 사업임
- 이성애·초혼·초혼 정상성에 기반한 설계 : 결혼장려금의 다양성 문제는 더 구조적임. 지원 요건으로 초혼·혼인신고를 명시하고 있음. 법적혼인제도 바깥에서 삶을 꾸리는 청년들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설계임
- 성소수자, 사실혼, 비혼동거청년, 비혼, 재혼 미혼 청년등은 해당 정책에서 배제 됨. 그리고 결혼장려금 공고문은 '외국인 제외'를 명시하며 이주 청년은 대전에서 오래 거주하고 한국인과 결혼을 하더라고, 본인이 외국인이면 신청이 불가능한 구조임. 지방소멸 위기 대응, 대전인구정착이 정책이 목표라는 점을 상기하면 역설적임
- 청년을 지역에 머물러야 할 인구이자, 출생률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바라보는 인구경제적 시각을 그대로 담고 있으며, 결혼과 정착을 청년의 표준 경로로 설정함으로써, 경로 밖에 있는 청년의 삶은 정책 안에서 보이지 않음
- 수혜자 96%가 도움이 되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경제적 지원의 체감 효과를 보여주지만, 이것이 청년이 대전에서 살아가고 싶다는 의지나 결혼 의향 자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음
- 특정한 생애 경로를 밟아야 할 존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다양한 조건과 선택 안에서 살아가는 청년의 삶 전체를 관점으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함

<표 8> 민선8기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사업 정리

구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민선8기)
사업 시작	2024년 10월 (민선8기 추진)
사업 상태	진행 중
지원 대상	만 18~39세 대전 거주 초혼 청년(소득·재산 요건 없음)
지원 금액	1인당 250만 원(부부 합산 최대 500만 원)
지원 방식	현금 일시 지급
사업 규모	약 200억 원 이후 추경 반복으로 확대
선정 방식	요건 충족 시 신청·심사·지급(선착순 아닌 심사제)
주요 수혜 통계	누적 신청 26,139명 / 지급 24,123명(2026년 1월 말 기준)
정책 목적	결혼 초기 경제 부담 완화 및대전 정착 지원
상정하는 청년상	초혼으로 결혼하는 청년('결혼하고 정착하는 청년')
정책 성격 분류	인구정책 성격이 강한 사업

- 앞서 살펴본 것처럼, 대전시 청년정책은 민선7기와 민선8기를 거치며 일정한 변화와 확장을 보여왔음
 - 민선7기는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청년 친화도시 대전”을 비전으로 삼고, 청년정책을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방향을 제시하였음
 - 특히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포스트 코로나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청년주도의 활동지원’ 등은 청년을 단순한 취업지원 대상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려는 시도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민선7기 청년정책의 실제 예산 구조를 살펴보면, 청년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 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음
 - 이는 당시 청년정책이 청년의 삶 전반을 다루려는 문제의식은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 정책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취업, 창업,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정착에 놓여 있었음을 보여줌
 - 즉, 청년을 다양한 삶의 조건과 욕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정책 전반의 중심축은 여전히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에 맞춰져 있었다고 볼 수 있음
- 민선8기 청년정책은 민선7기에 비해 사업 수와 예산 규모가 확대되었고, 대전 청년내일재단 출범, 청년정책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청년포털 통합운영, 청년활동공간 운영 등 제도적 기반도 강화되었음
 - 또한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은 구직단념 청년, 자립준비청년, 고립 위험 청년,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청년, 주거 취약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착하려는 시도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럼에도 민선8기 청년정책의 확대를 곧바로 청년의 삶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 민선8기 청년정책에는 청년 직접지원 사업과 취약성·다양성을 반영한 사업도 포함되어 있지만, 동시에 산업정책 성격이 강한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결혼·출산·정착을 유도하는 인구정책 결합형 사업, 일반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청년 수혜분도 함께 포함되어 있음

- 이는 청년정책의 외형은 확대되었지만, 실제 청년의 삶과 요구에서 출발한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는 별도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줌

□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청년정책이 얼마나 많아졌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닿았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함. 이에 청년의 삶에서 대전시 청년정책의 한계를 다시 살펴보고자 함.

- 첫째, 청년정책이 청년을 어떻게 개념화하고 있는지를 검토함. 둘째, 정책 수요와 지역 청년의 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연구 기반이 충분한지를 검토함. 셋째,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함. 넷째, 청년을 지역에서 살아가는 시민이 아니라 지역에 머물러야 할 인구로 바라보는 정책적 한계 검토함

	민선 7기 (2018~2021)	민선 8기 (2022~2025)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과 지역이 함께하는 청년 친화도시 대전” 비전 일자리 중심에서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영역으로 확장하려는 방향 제시 젠더공감 2030 청년활동가 양성사업,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포스트코로나 청년공익활동 지원사업, 청년주도의 활동지원 등 청년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참여하는 주체로 바라보려는 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와 예산 규모 확대 대전청년내일재단 출범, 청년정책 증창기 기본계획 수립, 청년포털 통합운영, 청년활동공간 운영 등 제도적 기반 강화 청년성장 프로젝트,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 청년층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등 다양한 청년을 정책 대상으로 포착
의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정책의 영역을 일자리에서 생활 전반으로 확장하는 기반 마련 청년의 참여와 활동, 공익적 역할에 주목한 사업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도적 기반과 전달체계 강화 취약 청년을 포괄하려는 시도 확대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예산의 상당 부분이 일자리 분야에 집중 정책의 무게중심이 취업·창업, 경제적 자립을 통한 지역정책에 맞춰져 있었음 청년을 다양한 삶의 조건과 욕구를 가진 주체로 바라보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노동시장 진입과 경제적 자립 중심의 정책 구조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정책 성격의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 다수 포함 (9개 사업, 23,245백만원, 20.0%) 결혼·출산·정착을 유도하는 인구정책 결합형 사업 포함 (4개 사업, 16,295백만원, 14.0%) 일반 시민 전체 대상 사업의 청년 수혜분 포함 (3개 사업, 11,778백만원, 10.2%) 외형적 확대에도 실제 청년의 삶과 요구에서 출발한 정책이 어느 정도인지 별도 검토 필요

따라서 이제 필요한 것은 “청년정책이 얼마나 많아졌는가”가 아니라 “그 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닿았는가”를 묻는 것

4가지 관점에서의 비판적 검토

<p>1 모호한 청년의 개념 : 청년정책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이란 무엇인가? 정책에서는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청년과 정책대상으로서 청년 사이의 충돌 	<p>2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청년정책 :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청년정책 (실태조사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순 사업 만족도 조사가 아닌, 정책 수요를 조사할 수 있는 실태조사 부재 지역 청년에 대한 연구 데이터 부족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관 부재) 	<p>3 정책 설계에서 제외된 청년들 :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수, 일부의 청년들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청년정책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없는 구조: 대청년 역할의 연계 청년정책을 맡아서 할 수 있는 조직(구조) 부재 	<p>4 청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인구’로 보는 정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의 지역사회 내 다양한 경험보다는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 인프라 개선에 초점이 맞춰진 정책 청년은 지역(대전)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로 돌아가야 할 때
--	--	--	---

▶ 청년정책은 ‘얼마나 많아졌는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삶에, 얼마나 닿았는가’로 평가되어야 함

<그림 4> 청년 정책의 전환을 위한 비판적 검토

1. 모호한 청년의 개념: 청년정책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 청년정책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전시가 '청년'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대전시는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을 연령 기준으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음. 이러한 연령 기준은 정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사업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유용함
- 그러나 청년을 단순히 연령 기준으로만 정의할 경우, 청년 내부의 다양한 삶의 조건과 경험이 충분히 드러나기 어려움
 - 같은 청년이라 하더라도 20대 초반 대학생, 취업준비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자립준비 청년, 가족 돌봄을 부담하는 청년, 1인가구 청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 등 청년은 자신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 지역에서 경험하는 문제와 필요로 하는 정책이 서로 다름
 - 청년정책이 청년을 하나의 단일한 연령집단으로 바라볼 경우, 청년 내부의 차이와 다양한 정책 수요는 정책 설계 과정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음
- 또한 청년정책은 종종 '표준적인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음
 - 즉, 교육을 받고, 취업을 준비하고, 일자리를 얻고, 독립하고, 결혼과 정착으로 이어지는 생애경로를 전제로 청년정책이 구성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은 정책 대상자로 쉽게 포착되지만, 그 경로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은 정책 안에서 충분히 보이지 않을 수 있음
- 이처럼 정책에서의 청년은 '실제 삶을 살아가는 다양한 청년'이라기보다, '사업 대상으로 분류되고 지원 조건에 맞춰 선별되는 청년'에 가까운 경우가 있음
 - 예를 들어 취업지원 정책은 구직활동을 하는 청년을, 창업지원 정책은 창업 가능성이 있는 청년을, 산업인재 양성 정책은 특정 전공이나 역량을 가진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됨
 - 이 과정에서 정책의 기준에 맞지 않거나, 제도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들은 청년정책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실제 지원에서는 소외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청년정책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을 몇 세부터 몇 세까지로 정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머무르지 않음. 더 중요한 것은 정책이 어떤 청년을 '정상적'이고 '표준적인' 청년으로 상정하고 있는지, 어떤 청년을 정책의 중심에 두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청년들이 정책의 언어와 기준에서 배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임
- 청년정책은 행정적으로 분류 가능한 청년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과 욕구를 가진 실제 청년의 삶에서 출발해야 함
- 이런 점에서 대전시 청년정책은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과 '삶을 살아가는 청년'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청년은 단순히 취업해야 할 인력, 지역에 머물러야 할 인구, 결혼과 정착을 해야 할 세대가 아니라, 각기 다른 조건과 가치, 관계망, 미래 전망을 가진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구성원임
- 따라서 청년정책은 연령기준에 따른 단일한 청년상이나 표준적인 생애경로를 전제하기보다,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를 정책 설계 과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 다양한 조건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함

2.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청년정책

-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닿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함. 그러나 대전시 청년정책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정책 설계의 출발점이 되는 지역 청년의 삶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연구 기반은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조례」에서는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연구조직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보기 어려움
 - 대전청년내일재단이 출범하면서 청년정책의 전달체계와 추진 기반은 강화되었지만, 지역 청년의 삶을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책으로 연결하는 연구기능은 아직 충분히 제도화되지 못한 상황임

- 실태조사 역시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핵심 기반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조사는 청년의 다양한 삶을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음. 단순한 사업 만족도 조사나 정책 인지도 조사, 일자리 정책 중심의 수요조사만으로는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왜 지역을 떠나거나 머무는지, 어떤 관계망과 생활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지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움
- 특히 청년 내부의 다양성을 고려한다면, 실태조사는 평균적인 청년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됨. 구직단념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1인가구 청년, 가족 돌봄을 부담하는 청년, 고립·은둔 청년, 문화예술 청년,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의 경험과 목소리를 세밀하게 담을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재 대전시 청년정책은 이러한 다양한 청년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축적하는 구조가 부족함
- 결국 근거 없는 청년정책은 청년의 실제 삶과 요구에서 출발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청년정책의 이름 아래 묶어내는 백화점식 사업 나열로 흐를 가능성이 큼
 - 청년의 삶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을 설계하면, 정책은 청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보다 행정이 제공하기 쉬운 사업을 중심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대전시 청년정책은 사업 수와 예산 규모를 확대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데서 다시 출발해야 함

3. 정책 설계에서 제외된 청년들: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

-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닿기 위해서는 행정의 미리 설계한 사업을 청년에게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말하고, 그것이 정책 의제와 사업 설계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그러나 현재 대전시 청년정책의 거버넌스와 소통 구조는 제한적임.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대청넷)를 중심으로 청년 의견수렴과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것이 대전 지역 청년 전체의 다양한 경험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려움

- 대청넷에 참여하는 청년들의 정책 제안과 활동은 의미가 있지만, 참여 가능한 청년의 범위가 제한적이고, 제안된 의견이 정책 설계, 집행, 평가 과정에 지속적으로 반영되는 구조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음
- 특히 대청넷에서 제안한 정책이 실제 필요한 정책임에도 행정 내부의 예산, 부서 간 조정, 청년 참여 가능 범위의 애매함으로 인해 실제 사업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참여는 정책 결정 과정의 실질적 참여라기 보다 의견수렴 절차에 불과한 경우가 다수임
- 또한 정책 공론장, 청년 소통 행사, 청년포털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수렴하려는 시도는 확인되지만,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청년의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있음
- 정책 과정에 익숙한 청년, 정보 접근성이 높은 청년, 시간과 여건이 되는 청년은 참여할 수 있지만, 구직단념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고립·은둔 청년, 가족 돌봄을 부담하는 청년, 지역사회와 느슨하게 연결된 청년들은 이러한 공식적 참여 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울 수 있음
- 결국 문제는 청년 의견수렴의 장이 존재하는가의 여부만이 아님. 중요한 것은 그 구조가 얼마나 다양한 청년에게 열려 있는지, 청년의 목소리가 단순 의견수렴이나 행사 참여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의제 설정, 사업 설계, 실행, 평가 과정으로 이어지는가임
- 형식적인 참여 구조는 청년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보다, 일부 참여 청년의 의견을 전체 청년의 요구처럼 대표하게 만들 수 있음. 또한 청년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정책보다 행정이 설계하고 집행하기 쉬운 사업이 청년정책으로 우선 반영될 위험이 있음
- 따라서 대전시 청년정책은 형식적 거버넌스를 넘어 실질적 거버넌스로 전환될 필요가 있음.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의견을 묻는 수준을 넘어, 청년과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정책을 설계하며, 그 결과를 함께 평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함

4. 청년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머물러야 할 인구'로 보는 정책

- 대전시 청년정책에서 청년의 지역 정착은 중요한 정책 과제로 다루어져 왔음. 청년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는 것은 지역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필요함. 따라서 청년정책이 일자리, 주거, 교통, 문화시설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은 일정한 의미가 있음

- 그러나 정주여건을 단순히 일자리 확충이나 생활 인프라 개선과 같은 방식으로만 이해할 경우,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는 실제 경험은 충분히 포착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이러한 접근에 대전은 청년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라기보다, 청년을 붙잡기 위해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공간으로 바라보는 발전주의적 시각에 머무를 수 있음
- 청년의 정주는 단순히 지역에 거주하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음. 청년이 지역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자신의 삶의 방식이 지역 안에서 존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그리고 대전에서 자신의 미래를 상상할 수 있는지가 함께 고려되어야 함
 - 즉 청년의 정주는 일자리와 인프라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살아가는 경험, 관계, 소속감, 가능성의 문제이기도 함
- 따라서 청년정책은 “어떻게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만 머물고 있어서는 안 됨. 오히려 “청년은 대전을 어떤 지역으로 경험하고 있는가”, “청년이 지역에서 살아가고 싶다고 느끼게 하는 관계와 경험은 무엇인가”를 묻는 데서 출발해야 함
-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을 지역에 남아야 할 인구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지역을 함께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인식해야 함. 정주여건의 개선은 단순한 인프라 확충이 아니라, 청년이 대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가능성을 지역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이어야 함

	기존의 시각	비판적 시각	정책 대안
1. 모호한 청년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 18~39세 연령집단 • 표준적 생애경로 중심 • 정책 대상자 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내부의 다양성 고려점 • 표준 경로 밖 청년 소외 • ‘삶의 청년’보다 ‘선별되는 청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조건·경험 반영 • 청년을 삶의 주체로 인식 • 다양한 청년이 참여하는 구조 마련
2. 구체적 근거가 없는 청년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와 연구기반 부족 • 만족도·인지도 조사 중심 • 전문 인력과 연구조직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삶과 수요 파악 미흡 • 데이터 없이 정책 설계 • 백화점식 사업 나열로 흐를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적 청년 실태조사 • 청년정책 연구기능 강화 •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평가
3. 정책 설계에서 제외된 청년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청넷 중심 의견수렴 • 행사·공론장 중심 참여 • 제한된 참여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청년의 접근이 어려움 • 정책화로 이어지기 어려움 • 형식적 거버넌스에 머무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질적 청년 거버넌스 구축 • 다양한 청년이 접근 가능한 참여 구조 • 의제 설정-설계-집행-평가 전 과정 참여
4. ‘머물러야 할 인구’로 보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주 중심 정책 • 일자리·주거·인프라 개선 중심 • 청년을 지역에 붙잡는 접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전주의적·공급 중심 시각 • 지역에서의 삶의 경험을 놓침 • 청년을 인구로만 바라보는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의 지역 경험과 인식에 주목 • 관계·소속감·가능성 중심 접근 • 청년을 함께 살아가는 시민으로 인식

<그림 5> 청년의 삶에서 바라본 대전시 청년정책의 한계와 대안

- 그동안 청년정책은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구호를 앞세워 추진되어 왔음. 그러나 실제 청년정책은 청년을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만들어가는 주체로 보기보다, 이미 설계된 사업의 대상으로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았음
- 특히 다양한 조건과 경험을 가진 청년들의 목소리가 정책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의 청년 정책 제안도 행정에서 불수용 되는 경우가 빈번했으며, 민선 8기 들어서는 하향식 정책 구조가 대다수였음. 청년정책은 청년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정책 기준에 부합하는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어 왔음
- 이런 점에서 “청년의 문제는 청년이 가장 잘 안다”는 구호는 청년정책 안에서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으며, 이는 대전시 청년 정책에서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보고서는 “청년에게는 ‘청년’정책이 필요해”를 핵심 주제로 설정하여, 그동안 대전시 청년 정책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어떠한 청년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봄
 - 본 보고서에서 이야기하는 ‘청년’정책은 단순히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의미하지 않음. 청년이 지역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어떤 지역을 원하는지를 바탕으로 설계되는 정책을 의미함
- 따라서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을 지원 대상, 산업인재, 정착해야 할 인구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청년을 지역에서 살아가고,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시민으로 인식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청년의 수요와 필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 장에서는 OECD가 2024년에 발간한 OECD Youth Policy Toolkit(OECD 청년정책 툴킷)에서 제시하는 청년정책의 방향을 참고하여, 앞서 살펴본 대전시 청년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바탕으로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1. 청년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정책: OECD 청년정책

□ OECD가 2024년에 발간한 『OECD Youth Policy Toolkit』에서는 청년정책을 단순한 일자리 정책이나 복지사업으로 보지 않음. 청년에게 더 나은 기회를 만들기 위해 교육, 고용, 주거, 건강, 사회적 포용, 참여, 거버넌스를 함께 고려하는 통합적 접근을 강조함

□ OECD 청년정책 툴킷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다양한 역량에 대한 교육 필요):** 청년에게 필요한 역량은 단순한 취업 기술에 그치지 않음. OECD는 디지털 역량, 사회·정서적 역량, 시민역량, 창의성, 금융 이해력, 의사소통 능력 등 청년이 변화하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한 폭넓은 역량을 강조함
- ② **(좋은 일자리 제공):** 청년 노동정책은 취업률보다 좋은 일자리에 초점을 두어야 함.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것뿐 아니라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용서비스, 경력지도, 직업교육, 창업·사회적기업 참여 기회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③ **(사회적 포용):** 청년의 사회적 포용은 고용 여부만으로 판단될 수 없음. 소득, 주거, 건강,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망은 청년의 삶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청년정책은 개별 지원을 넘어 삶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함
- ④ **(참여와 대표성):** 청년은 정책의 수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말할 수 있는 시민으로 인식되어야 함
- ⑤ **(정부의 통합적 거버넌스):** 청년정책은 부서별 사업의 단순 합이 아니라 통합적 거버넌스를 통해 추진되어야 함. 청년의 삶은 교육, 일자리, 주거, 복지, 건강, 참여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와 부서 간 협력 체계가 필요함
- ⑥ **(데이터와 연구 기반):** 청년정책은 데이터와 연구에 기반해야 함. 청년의 상황을 성별, 연령, 지역, 사회경제적 배경 등으로 세분화해 파악하고, 이를 정책 설계와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 실태조사와 연구 기능이 필요함

<표 9> OECD 청년 정책 툴킷의 시사점

청년정책의 핵심방향	주요 내용	대전시 청년정책에 주는 시사점
폭넓은 청년 역량 지원	취업 기술뿐 아니라 디지털 역량, 시민역량, 사회·정서적 역량, 금융 이해력 등을 강조	단순 취업교육이 아니라 청년이 지역에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역량 지원 필요
좋은 일자리 중심의 노동정책	취업률보다 일자리의 질, 고용서비스, 직업교육, 경력지도, 창업 기회 강조	청년을 노동시장에 연결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일자리 정책 필요
사회적 포용과 삶의 안정	소득, 주거, 건강, 정신건강, 관계망을 함께 고려	청년 문제를 개별 사업으로 쪼개지 않고 삶 전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 필요
청년 참여와 대표성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의 시민으로 인식	대청넷 등 의견수렴을 넘어 정책 설계·집행·평가에 참여하는 구조 필요
통합적 거버넌스와 컨트롤타워	부서별 사업을 조정하고 연결하는 범정부적 접근 강조	대전시 청년정책을 총괄·조정할 컨트롤타워와 부서 간 협력 체계 필요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세분화된 청년 데이터, 실태조사, 정책 평가의 중요성 강조	지역 청년의 삶을 지속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연구 기능 필요

자료: OECD(2024), 『OECD Youth Policy Toolkit』

2. 정책 제안 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거버넌스 구축

-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의견을 단순히 수렴하는 수준을 넘어, 다양한 청년이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마련해야 함. 청년정책이 실제 청년의 삶에 닿기 위해서는 행정의 미리 설계한 사업에 청년을 참여시키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이 자신의 경험과 요구를 말하고, 그것이 정책 의제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 현재 대전시는 대전청년정책네트워크, 청년포털, 청년 소통 행사 등을 통해 청년 의견을 수렴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대전 지역 청년 전체의 다양한 삶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은 대체로 정보 접근성이 높고, 행정 참여 경험이 있으며, 시간과 여건을 갖춘 청년으로 제한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민선9기 청년 거버넌스는 기존 참여기구의 운영을 확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됨. 구직단념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1인가구 청년, 가족 돌봄을 부담하는 청년, 고립·은둔 청년, 문화예술 청년, 지역사회 활동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발굴할 수 있는 다층적 참여 구조가 필요함
- 이를 위해 청년 당사자 간담회, 생활권별 청년 공론장, 주제별 정책 라운드테이블, 찾아가는 청년 의견수렴, 온라인 속의 플랫폼 등을 운영하여 공식 기구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의 목소리도 정책 과정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청년이 제안한 의견이 단순히 검토 단계에서 끝나지 않도록, 제안→검토→반영→피드백의 절차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음. 청년이 제안한 정책이 반영되었는지, 반영되지 않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향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공개해야 함. 이를 통해 청년참여가 형식적인 의견수렴에 머무르지 않고, 정책 결정 과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음
- 결국 청년 거버넌스의 핵심은 더 많은 회의나 행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청년의 경험이 정책의 언어로 번역되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임.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의 문제를 함께 정의하고 해결하는 정책 주체로 세우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표 10> 정책 제안 ① 다양한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청년 거버넌스 구축

제안 과제	주요 내용
다층적 청년 참여 구조 마련	- 생활권별, 주제별, 대상별 청년 의견수렴 구조 운영
찾아가는 청년 의견수렴	- 고립·은둔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등 공식 참여구조에 접근하기 어려운 청년의 의견 발굴
주제별 정책 라운드테이블 운영	- 일자리, 주거, 마음건강, 문화, 관계망, 정주 경험 등 청년 삶의 주제별 공론장 운영
정책 반영 피드백 제도화	- 청년 제안의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후속 조치 계획을 공개
청년 공동설계 방식 도입	- 행정이 사업을 설계한 뒤 의견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청년과 함께 문제 정의부터 사업 설계까지 진행

3. 정책 제안 ② 근거에 기반한 청년정책 설계

-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에 기반해 설계될 필요가 있음. 그동안 청년정책은 사업 수와 예산 규모를 확대해 왔지만, 실제 대전 청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분석은 충분하지 않았음
- 청년정책이 청년의 실제 수요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사업 만족도 조사나 정책 인지도 조사에 머물러서는 안 됨. 만족도 조사는 이미 시행된 사업에 대한 평가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년들이 지역에서 어떤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지, 기존 정책이 포착하지 못한 수요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대전시는 정기적인 청년 실태조사를 통해 청년의 생활실태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야 함. 실태조사는 일자리, 주거, 소득, 건강, 마음건강, 관계망, 문화생활, 지역사회 참여, 지역 인식, 정주 의향 등을 포괄해야 하며, 청년들이 왜 대전을 떠나거나 머무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함
- 특히 청년 실태조사는 평균적인 청년의 삶을 확인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됨. 취업준비 청년, 비경제활동 청년, 불안정 노동 청년, 1인가구 청년, 가족 돌봄을 부담하는 청년, 고립·은둔 청년, 자립준비청년, 문화예술 청년, 지역사회 활동 청년 등 다양한 청년의 경험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함. 이를 통해 어떤 청년이 정책에 접근하고 있으며, 어떤 청년이 정책 밖에 남겨져 있는지를 확인해야 함
- 또한 실태조사 결과가 단순 보고서로 끝나지 않도록, 조사 결과를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구조가 필요함. 청년정책은 행정이 추진 가능한 사업을 먼저 정하고 청년 수요를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조사와 연구를 통해 확인된 청년의 삶과 필요를 바탕으로 설계되어야 함
- 결국 근거에 기반한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무엇을 지원할 것인가”를 행정이 먼저 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대전 청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무엇을 필요로 하는가”를 확인하는 데서 출발해야 함.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실태조사, 연구, 정책 설계, 평가가 연결되는 체계를 통해 청년의 삶에 실제로 닿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함

<표 11> 정책 제안 ② 근거에 기반한 청년정책 설계

제안 과제	주요 내용
정기 청년 실태조사 실시	- 대전 청년의 생활실태, 정책 수요, 지역 인식, 정주 경험, 관계망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
청년 유형별 조사 강화	- 취업준비, 비경제활동, 불안정 노동, 1인가구, 고립·은둔, 자립준비, 문화예술 청년 등 세분화된 조사 실시
정책 수요조사 체계화	- 단순 만족도 조사가 아니라 청년이 실제 필요로 하는 정책과 기존 정책의 사각지대를 파악
실태조사-시행계획 연계	- 조사 결과가 다음 연도 청년정책 시행계획과 예산 편성에 반영되도록 제도화
정책 효과 평가 도입	- 사업 수, 참여자 수,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정책이 청년의 삶에 미친 변화를 평가

4. 정책 제안 ③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의 성취와 성공만을 지원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실패 이후 다시 회복하고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음. 청년기는 진로, 취업, 주거, 사회적 관계 등 여러 전환을 경험하는 시기이며, 이 과정에서 실패와 좌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적 조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
- 그러나 기존 청년정책은 주로 취업 준비, 창업, 자산형성, 지역 정착 등 ‘앞으로 나아가는 청년’을 중심으로 설계되는 경향이 있었음. 반면 취업에 실패한 청년, 창업에 실패한 청년, 장기간 구직을 포기한 청년, 관계망이 약화된 청년,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지역사회와 단절된 청년에 대한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부족했음
- 특히 청년정책이 성과 중심으로 운영될 경우, 정책은 취업률, 창업 건수, 참여자 수, 지원금 집행률과 같이 측정 가능한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되기 쉬움. 이 과정에서 실패를 경험한 청년,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청년, 당장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청년은 정책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있음
- 청년정책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실패 이후에도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함

- 또한 청년의 회복은 경제적 지원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청년이 다시 사회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정서적 안전망과 사회적 관계망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 마음건강 상담, 또래 지지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 생활권 기반 청년공간, 신뢰할 수 있는 상담·연계 체계는 청년이 고립되지 않고 자신의 삶을 다시 구성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수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청년을 문제가 있는 대상으로 낙인찍는 방식이 아니라, 누구나 삶의 과정에서 위기와 실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설계되어야 함. 청년의 실패를 개인의 부족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회복과 재도전이 가능한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청년정책의 역할임
- 결국 민선9기 청년정책은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청년을 선별해 지원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함. 청년이 실패해도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연결되고, 쉬어갈 수 있으며, 새로운 진로와 삶을 모색할 수 있는 정책 구조를 마련해야 함. 이는 청년의 삶을 경쟁과 성과의 관점이 아니라 회복, 안전, 관계, 재도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청년정책으로의 전환을 의미함

<표 12> 정책 제안 ③ 사회적 안전망 구축과 회복을 지원하는 청년정책

제안 과제	주요 내용
청년 재도전 지원체계 구축	- 취업 실패, 창업 실패, 학업·진로 중단 이후 다시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상담·교육·연계 지원
청년 회복 상담 프로그램 운영	- 장기 미취업, 구직단념, 관계 단절,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 맞춤형 상담 지원
창업 실패 청년 지원	- 폐업, 채무, 심리 회복, 재취업, 재창업을 연결하는 통합 지원체계 마련
고립·은둔 청년 관계망 회복	- 찾아가는 상담, 또래 모임, 지역 커뮤니티 활동, 단계별 사회참여 프로그램 운영
생활권 기반 청년 안전망 구축	- 청년공간, 복지기관, 정신건강복지센터, 고용기관, 시민단체를 연결한 지역 단위 지원망 마련
성과지표 전환	- 취업률, 참여자 수 중심 평가에서 회복 경험, 관계망 형성, 정책 접근성, 재도전 가능성 등으로 평가 확대

5. 정책 제안 ④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 대전시는 청년정책과에서 청년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년정책과가 대전시 전체 청년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조정, 평가하는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청년의 삶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 건강, 문화, 참여가 서로 연결되어 있음에도, 실제 정책은 분야별, 부서별 사업으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
-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개별 부서와 기관에 흩어져 있는 청년사업을 연결하고 조정할 수 있는 통합적 추진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을 설립하면서 청년정책 추진 기반을 강화하였음. 이는 청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음. 그러나 대전청년내일재단이 단순한 사업 수행기관이나 정책 전달기관에 머무를 경우, 청년정책의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민선9기에는 대전청년내일재단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대전청년내일재단은 청년사업을 운영하는 기관을 넘어, 청년 실태조사와 연구, 정책 의제 발굴, 부서 간 사업 조정, 청년참여 지원, 정책 평가와 환류를 담당하는 청년정책 전문기관으로 기능해야 함. 이를 위해 조사·연구 기능과 정책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할 필요가 있음
 - 2025년 3월 대전청년내일재단은 대전세종연구원(현 대전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청년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전연구원 내부에도 청년 연구를 전담할 수 있는 전문 연구자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따라서 민선9기에는 청년 연구를 지속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재단 내부에 배치하고, 기존의 일자리, 젠더, 문화 등 분야별로 파편화된 청년 연구를 넘어 청년의 삶을 통합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광역과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협력 구조를 마련해야 함. 대전시는 청년정책의 기본 방향, 중장기 계획, 예산 조정, 연구 및 조사, 정책 평가, 광역 단위 사업을 담당하고, 자치구는 생활권 단위에서 청년의 실제 수요를 발굴하고, 청년공간, 커뮤니티, 상담과 관계망 형성 등 지역 밀착형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나눌 필요가 있음

- 특히 청년정책은 광역 단위의 계획만으로 충분하지 않음. 청년의 삶은 실제로 자신 생활권(자신이 사는 동네, 일하는 공간, 지역 커뮤니티 등)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와 생활권 단위의 정책 실행력이 중요함. 따라서 대전시는 자치구별 청년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광역-기초 간 정기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해야 함
- 결국 청년정책 컨트롤타워는 단순히 하나의 기관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중요한 것은 청년정책의 방향을 종합적으로 설정하고, 부서별 사업을 연결하며, 청년의 목소리와 실태조사 결과가 정책 설계와 예산 편성, 평가 과정에 반영되도록 만드는 구조를 의미함

<표 13> 정책 제안 ④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구축

제안 과제	주요 내용
청년정책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별 청년사업을 종합 조정하고, 정책 방향·예산·성과를 통합 관리 - 대전시, 자치구, 청년내일재단, 청년 당사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정기 협의 구조 마련
대전청년내일재단 역할 재정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수행기관을 넘어 조사·연구, 정책 발굴, 평가, 환류 기능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강화 - 청년 실태조사, 정책 수요 분석, 사업 효과 평가를 담당할 전문 인력 확보
광역-기초 역할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전시는 중장기 방향과 정책 조정, 자치구는 생활권 기반 청년사업과 수요 발굴 담당

6. 정책 제안 ⑤ 청년을 동반자로 보는 정책 지원

-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을 지역에 정착시켜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역을 함께 살아가고 만들어가는 동반자로 바라보는 관점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청년정책은 청년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일자리, 주거, 생활 인프라 등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음. 이러한 정책은 대전의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청년을 지역에 머물게 해야 할 인구로만 바라볼 경우 청년의 실제 삶과 지역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움
- 청년의 지역 정주는 단순히 대전에 주소를 두고 머무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청년이 지역에서 관계를 맺고, 지역사회 안에서 활동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지속가능한 대전 정주환경이 조성될 수 있음

- 따라서 청년정책은 “어떻게 청년을 붙잡을 것인가”가 아니라, “청년이 대전에서 무엇을 경험하는가”, “청년이 왜 대전에서 살아가고 싶어 하는가”를 묻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함
- 이를 위해 민선9기 청년정책은 청년의 장기적 삶 설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 청년이 지역에서 일하고, 살고, 관계를 맺으며,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일자리와 주거뿐 아니라 관계망, 문화, 지역사회 참여, 마음건강, 재도전 기회 등을 함께 지원해야 함. 청년의 삶은 개별 사업으로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책 역시 청년의 생애 과정과 지역 경험을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함
- 결국 민선9기 대전시 청년정책은 청년을 ‘정착시켜야 할 대상’에서 ‘함께 살아가는 주체’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함. 청년이 대전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가능성을 지역 안에서 함께 발견하고 만들어갈 때, 청년정책은 비로소 청년에게 닿는 정책이 될 수 있음

<표 14> 정책 제안 ⑤ 청년을 동반자로 보는 정책 지원

제안 과제	주요 내용
청년 삶 설계 지원체계 마련	- 일자리, 주거, 관계망, 마음건강, 문화, 재도전 기회를 연결한 통합 지원
지역 경험 기반 정책 설계	- 청년이 대전을 어떻게 경험하고 인식하는지 조사하고 정책에 반영
청년 지역활동 지원	- 청년이 지역 의제 발굴, 공동체 활동, 사회적경제, 공익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청년-지역 파트너십 구축	- 청년을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지역사회를 함께 만드는 동반자로 인정하고 협력 구조 마련